

전주시 재정 비상관리 체계 가동

전주시장직 인수위, “시,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 등 복합 재정위기”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원칙적 동결 등 제시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이 재정비상관리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8일 전주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추경 재원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의 일반채무는 올해 말 기준 6,8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투자사업(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 규모로, 관리 채무 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포인트 차이로 접근한 수치다.

특히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유사도시 평균인 1,228억원의 약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식 채무 외 우발채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협약 부담금 1,221억원과 후박제 도성 토지 비축 사업 예정액 562억원 등 총 1,783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도비 미 반환금 681억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원, 대학 협력 사업 미매칭 부담금 43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전주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실질 재정 부담 규모는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재정 위기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

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정상 지급,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가 검토했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연금 부담금 지급 유예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기를 미래로 넘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세입 둔화 국면에서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정책적 판단과 투자계획·채무관리 계획·추경 운용 과정에서의 재정

통제 미흡을 지적했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뿐 아니라 우발채무와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출해야 할 분야와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착공 전 대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향후 지방채와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 장래 투자사업 부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 위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출 구조 조정과 채납정수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고형사탕가뭄금 확대 등을 통해 전주시 재정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18일 고창군과 정읍시를 방문해 재해복구사업과 도로공사 현장 점검을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살폈다.

도,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 현장 점검

김관영 도지사, 고창·정읍 찾아 재난 대응 안전관리 대책 살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18일 고창군과 정읍시를 방문해 재해 복구사업과 도로공사 현장 점검을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살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도지사는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해리교차로 양벽 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리교차로는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교량 접속도로 보강도양벽 일부가 유실된 곳으로, 전복차도도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보강도양벽 복구와 도로 재포장, 배수시설 정비, 하부 교차로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차 공정을 완료해 공정률 75%를 달성했으며, 2차 공정을 착공해 L형 양벽 설치와 교차로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달 말 본선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오는 8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도지사는 현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배수 시설과 사면 양벽 등 취약시설을 철

저히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 고부면 ‘고부~영일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도지사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폭염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대책 등을 확인했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냉방장치와 음용수 비치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해복구사업장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화훼산업 위기극복 해법 모색

국회서 화훼산업 발전·꽃 소비문화 활성화 정책토론회

국내 화훼산업의 위기 극복과 꽃 소비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문규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2간담회실에서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 문화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언론계, 정부 관계자 생산자들이 참석해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입 꽃 증가와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꽃 소비를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화훼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들이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규주 의원은 외국산 꽃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현실을 언급하며 “꽃 소비를 이벤트성 소비가 아닌

생활문화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꽃 소비문화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통상환경 변화와 소비 감소로 국내 화훼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노복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국내 화훼산업의 현황과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꽃 소비 대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업계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병모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생산자, 업계 관계자, 청년농업인, 정부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유통 혁신과 함께 꽃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만호 기자

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사회 시대에 걸맞은 지역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와 도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도내·외 인권전문가와 시민사

회 활동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인권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기본사회시대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회구조 변화와 복합적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행정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만호 기자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도전자의 포부

김희수 “상생·균형으로 실력 있는 정책의회 조성” | 의원 중심 의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제시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상생·균형의 정치로 실력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의장 출마 배경과 함께 협치, 지원, 신뢰 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비전과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가 단순한 견제기관을 넘어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중심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배경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 △의원 중심의 의정 지원 인프라 확충 △청렴과 신뢰 회복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협치 분야에서는 민선 9기 도정 교육청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전북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의 대형 현안은 지방정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북 연구 국회의원들과 정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회의 장협의회와 연대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으

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의원 1지원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청에 거점형 의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예산 반영과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조례 시행 추진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 향상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청렴도가 4등급에 머물렀던 것은 매우 뼈아픈 결과”라며 “임기 내 청렴도를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심사감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원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의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 소속으로 운영

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회 이관을 추진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권과 감사권 독립은 지방분권 완성의 마지막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입법 전진을 구축해 반드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의장 리더십에 대해 “의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봉사직”이라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전북 발전과 의원 모두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대통합의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고 싶은 의회, 보고 싶은 의원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의회 개혁과 위상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새만금공사, 폭염 안전 캠페인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가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6월, 현장에서 쌓아온 폭염 대응 노하우를 들고 주민 결의로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18일 김제시체육관에서 열었다.

공사는 2026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와 연계해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캠페인 폭염 속 안전 집 함께 지켜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행사장 내 안전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배너를 게시하고 충분한 물 섭취, 그늘·냉방장지 이용, 규칙적 휴식, 개인 보냉장구 활용,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매립지 위에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새만금 도시조성 전담 공공기관으로, 그늘·차폐물이 없는 현장에서 연중 대규모 육의 공사를 수행하며 매년 온열질환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해 왔다. /1만호 기자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합니다”

17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기인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등 당선 동문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당선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짐했다.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 국토부, 안심 전세 앱 9월 대개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 ‘안심 전세’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제청, 법원 행정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확인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정보, 국제·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만호 기자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특정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해 ‘안전’, ‘주의’, ‘위험’ 등급으로 표시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1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